

12-15 (통권 제 486호)

2012. 4. 2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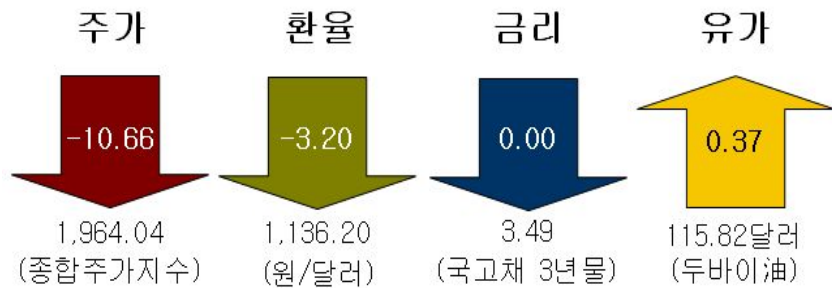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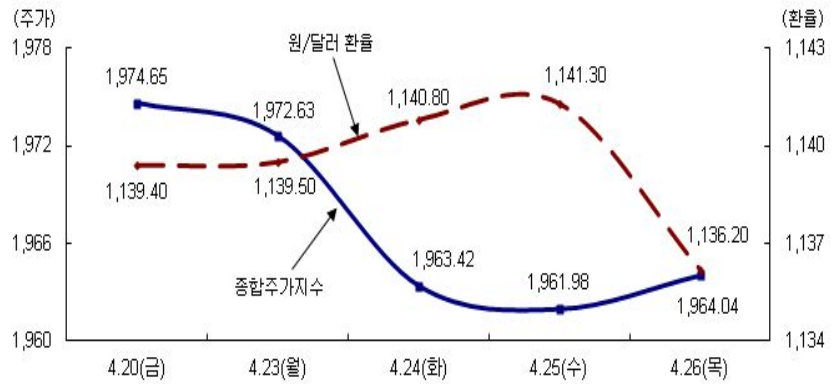
-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 20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 66만개 기회 손실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20~4.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20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 66만개 기회 손실

**(FDI 순유출 급증)**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2011년 신고기준 445억 달러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큰 변화가 없어, FDI 순유출도 30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목적별로 보면,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현지시장진출, 보호무역타개, 저임금 활용, 제3국 진출 등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1980년대 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중심이었으나 1990년 이후 중국, 베트남, 홍콩,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IT·자동차·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2006년 이후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로 개인의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FDI 순유출 급증의 원인과 문제점)** (원인)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FDI순유출이 급증한 것은 국내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등 사업환경과 비용우위가 나빠지고, 해외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해외투자 자유화 정책이 2006년 이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점)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와 FDI 순유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1990년 1.1%에서 2010년 8.0%로 높아지고 설비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이 60.3%까지 낮아지는 등 국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12년간 제조업 일자리 약66만개의 기회손실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투자부진과 일자리 손실은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해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로 내려앉았다.

**(시사점: 사업환경 개선과 'U턴특구' 전략)** 국내 정주여건 등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고, 원산지규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려는 U턴 기업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U턴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확대, 정규직 고용 시 세제 인센티브 확대(중소기업 한정) 등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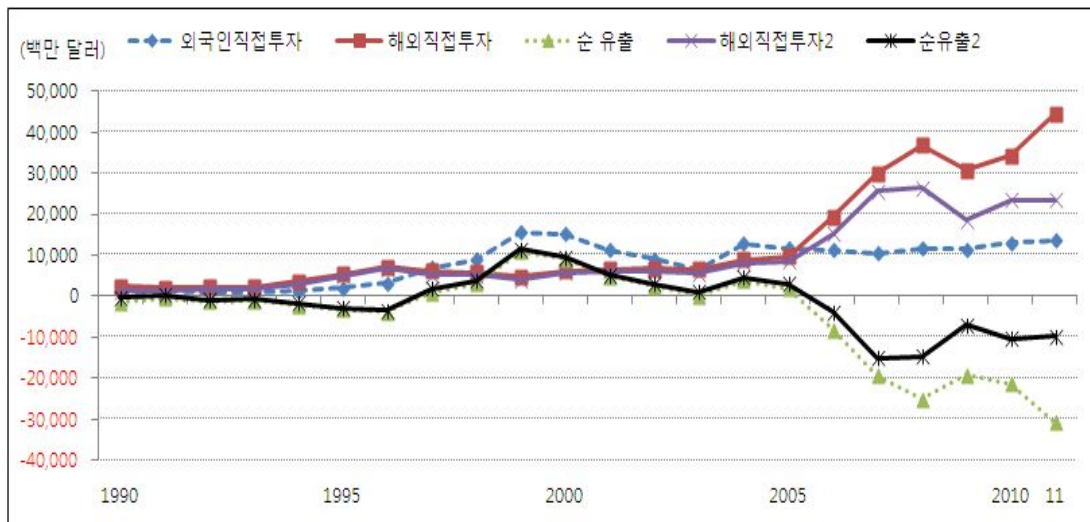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여섯 개 경제자유구역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특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R&D연구기관의 유치 강화로 국내 고급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이들과 연계된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 개성공단을 '유턴 단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FDI 순유출<sup>1)</sup> 급증과 U턴 추이

○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자원개발 확대 등으로 해외직접투자(OFDI)는 급증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정체되고 있어, 2006년 이후 FDI 순유출이 급증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OFDI)의 급증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445억 달러에 달하고, 순유출도 308억 달러를 기록
  -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외하면, '11년 해외직접투자는 23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며, 해외 순유출 금액도 97억 달러로 대폭 줄어듦
- 외국인직접투자(IFDI) 주춤 :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1999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래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
  - 해외직접투자(OFDI)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연평균 3% 증가에 그침

< FDI 순유출 증가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주 : 1. 신고기준.

2. 해외직접투자2 = 해외직접투자 - 자원개발투자

3. 순유출 2 = 순유출(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 자원개발투자

1) FDI순유출 = 외국인직접투자(IFDI) - 해외직접투자(OFDI). 해외직접투자(OFDI)란 국내법인이 수출, 시장개척, 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는 투자.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것. 단기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다름.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유형에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출자 내국법인에 장기차관 제공,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등(자료: <http://www.invest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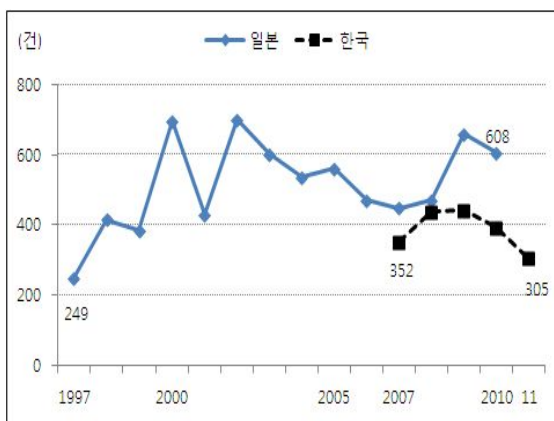
○ 해외로 진출했던 일본기업의 국내 유턴(U-Turn)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국, 대만도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음

-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철수가 1997년 249건에서 2010년 60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대만 등<sup>2)</sup>도 국내로의 유턴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1년 3.11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일본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U턴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
- 미국은 유턴 기업의 이전비용의 20%를 보조, 설비투자비용의 조세감면 추진
- 대만도 U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융자제도, 기술향상 지원을 추진
- 국내기업의 철수는 2007년 352건에서 2011년 305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한-미FTA 체결 등으로 유턴 의향을 지닌 기업들이 늘고 있음<sup>3)</sup>

○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3차 산업혁명'<sup>4)</sup>이 진행되고 대량생산에서 개별화된 생산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한 일부 일자리는 다시 선진국으로 유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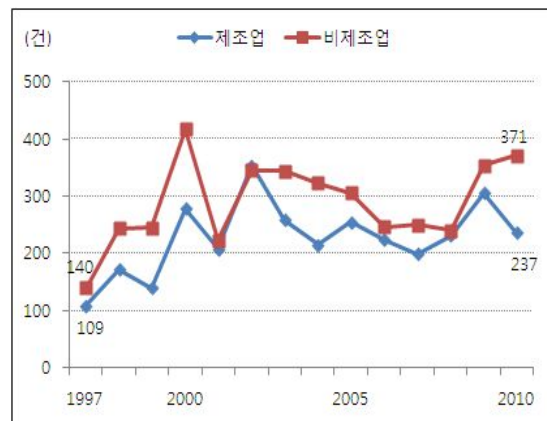
- 탄소섬유와 같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 3D 프린터, 로봇과 자동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 생산 등의 영향으로 소량의 제품을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선진국으로의 제조업 유턴이 가능해질 것임

<韓-日 기업의 국내 U턴 추이 비교>



자료: 국회 기재위, 日本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주: 1. 한국은 해외법인 폐쇄 후 국내 송금 건수  
 2. 일본은 철수, 해산, 이전 건수 포함

<日本 제조-非제조 기업의 U턴 추이>



자료: 日本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주: 철수, 해산, 이전 건수 포함

2)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2012.4.26  
 3) KOTRA가 1월 해외진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유턴 의사가 있는 기업이 30개(12.5%)로 과거 증가  
 4) The Economist,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2012.4.21, pp.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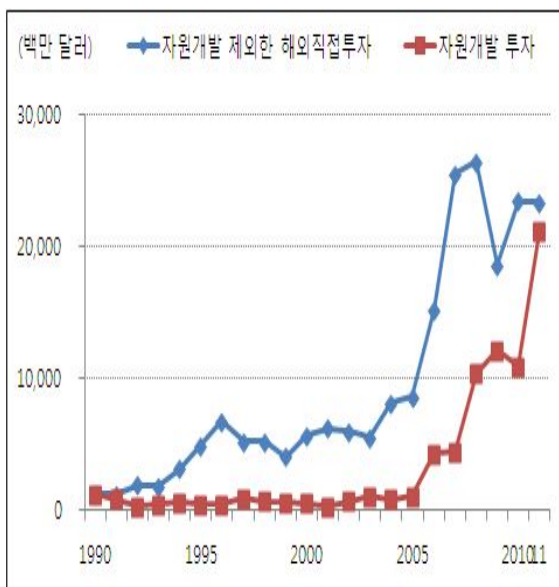
## 2.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의 몇 가지 특징

### (1) (투자목적별) 자원개발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급증

○ 2006년 이후 자원개발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211.4억 달러로 2005년의 19.3배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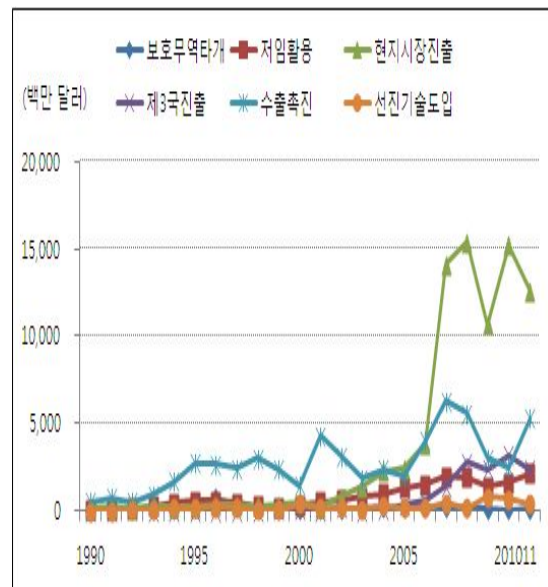
- 자원개발 투자는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06년 42.5억 달러로 4배가량 급등한 후 2011년에는 211.4억 달러로서 2005년(10.9억 달러)의 19.3배에 달함
  - 2005년 10.9억\$ → 2006년 42.5억\$ → 2008년 103.8억\$ → 2011년 211.4억\$
-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제3국진출, 보호무역타개 등 산업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sup>5)</sup>는 2000년 9.2억 달러에서 2010년 171.8억 달러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에 약 18배가량 급증함
  - 1990년대에는 국내 제조업 기반 하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투자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자원개발투자 및 기타 투자\*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해외직접투자에서 자원개발투자 제외

<투자목적별 해외투자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자원개발투자, 원자재확보, 기타 제외

5)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투자를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보호무역타개'의 합으로 계산해봄

## (2) (국가별) 투자대상 국가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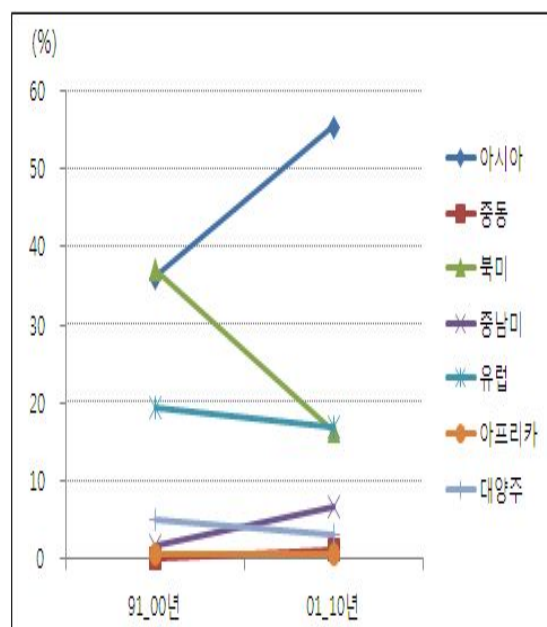
- 1980년대까지는 수출과 원자재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전체 투자의 90% 이상이 집중되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중국과 베트남, 홍콩, 영국, 브라질 등으로 투자대상이 다변화되고 있음
- 1990년 이후에는 중국에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베트남, 홍콩, 영국,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상위 5개국 투자비중 : 94.3%('81) → 70.5%('90) → 69.4%('00) → 50.0%('10)
-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해외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북미의 비중은 크게 감소함. 아시아와 북미 중심에서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도 다변화되고 있음
  - 아시아: 44.2%('80S)→36.1%('90S)→55.5%('00S), 북미: 39.9%→37.2%→16.3%('00S)
  - 유럽: 4.9%('80S)→19.3%('90S)→16.8%('00S), 중남미: 0.0%→1.8%→6.6%('00S)
  - 아프리카: 0.0%('80S)→0.5%('90S)→0.6%('00S)

< 해외직접투자 집중도 추이 >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상위 5국	70.5	65.7	69.4	65.8	50.0	64.8
상위 10국	83.9	79.0	80.6	77.4	74.3	78.8
상위 20국	95.7	92.4	90.9	88.8	89.4	90.4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 기준

< 현지시장진출 투자의 지역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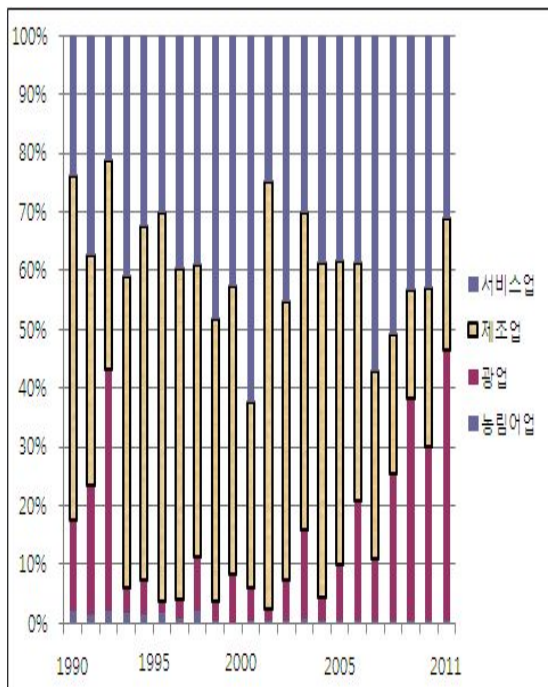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 기준

### (3) (산업별) 제조업 비중 감소, 서비스업 비중 증가, 광업 비중 급증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광업의 비중은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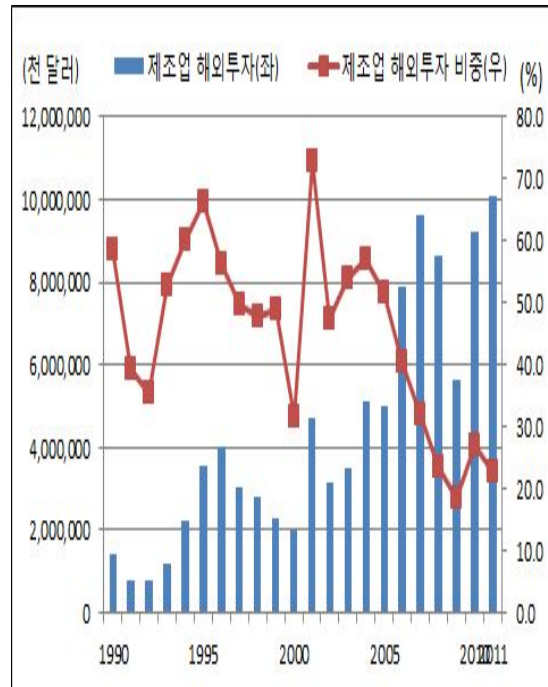
- 제조업의 투자 비중은 1990년대 평균 48.9%에서 2000년대 평균 42.4%로 완만하게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은 37.1%에서 37.3%로 완만하게 증가했으며, 광업의 투자 비중은 10.5%에서 16.2%로 크게 증가
  - 제조업/서비스업/광업 비중(%): 48.9/37.1/10.5('91~'00평균) → 42.4/37.3/16.2('01~'10평균)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광업의 비중이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광업비중: 5.5%('00년) → 9.3%('05년) → 29.6%('10년) → 45.8%('11년)
  - 투자목적별로 '자원개발'이 급증한 시기와 산업별로 '광업'의 비중이 급증한 시기가 비슷함

<해외투자의 산업별 비중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 기준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 기준



(4) (업종별) IT/車/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 비중 급증

○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섬유, 의복, 가구, 목제품 등 경공업 제품의 해외투자 비중은 1980~90년대 대비 감소하고,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공업,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해외투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반도체/컴퓨터/통신장비 업종으로서 2000년대 10년간<sup>6)</sup>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9%, 화학물질 및 제품 8.8%의 순으로 높은 비중임
- 반면, 섬유 3.9%, 의복 3.7%, 가구 0.4%, 목제품 0.5%로 비중이 낮음<sup>7)</sup>
- IT, 자동차, 화학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금액 기준으로 각각 98.2배, 52.3배, 36.1배 급증했으며, 비중 기준으로도 각각 5배, 3배, 2배 이상 증가했음
- 반면, 섬유, 의복, 가구, 목제품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각각 4.3배, 9.2배, 0.2배, 4.9배 증가에 그쳐 제조업 전체 평균 17.3배에 크게 못 미침

< 제조업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및 증가 추이 >

		화학 물질 및 제품	전자 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 일러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전체
비중* (%)	1980년대	4.2	4.3	0.2	0.3	4.9	0.0	100.0
	1990년대	5.9	26.4	2.0	2.0	13.4	0.8	100.0
	2000년대	8.8	24.5	4.0	5.1	14.9	4.1	100.0
증가* (배)	2000년대 1980년대	36.1	98.2	309.9	253.9	52.3	-	17.3
	2000년대 1990년대	4.1	2.6	5.5	7.1	3.1	13.7	2.8

자료: 수출입은행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계산

주: 1. 비중은 제조업 전체 해외투자에서 각 업종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2. 증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1980년대(10년) 금액 대비 1990년대와 2000년대 금액의 배율

6)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제조업 전체 해외투자금액 대비 각 업종별 해외투자금액의 비중을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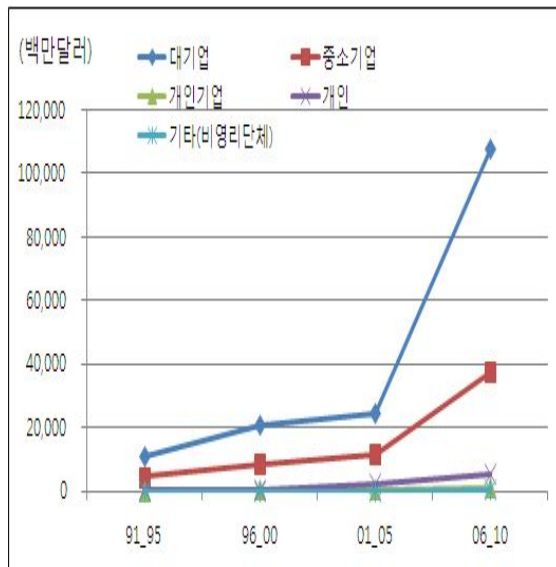
7) 1980년대에는 섬유 15.6%, 의복 7.0%, 가구 32.4%, 목제품 1.7%로서 2000년대에 비해 비중이 훨씬 높았음

### (5) (투자자별) 대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급증

○ 主투자자<sup>8)</sup>별 해외투자 비중을 보면 최근 들어 대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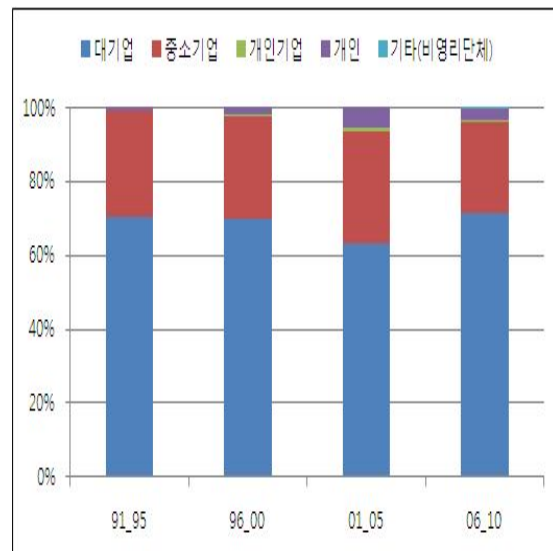
- 主투자자별로 해외투자 추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해외 부동산투자 규제완화<sup>9)</sup>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함
- 대기업의 경우, 해외투자 규모가 1990년대 초에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에 그쳤으나 2010년에 28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증가함
- 개인투자자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연간 천만 달러 내외에 그쳤으나, 2006년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 조치로 2007년에 15.2억 달러까지 급증했고, 2010년에는 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主투자자별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은 70%내외, 중소기업은 30%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990년대에 1%내외에서 2000년대에는 5%내외로 크게 증가함
- (91~95년) 0.8% → (96~00년) 1.9% → (01~05년) 5.3% → (06~10년) 3.3%

<主투자자별 해외투자 금액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 기준, 5년 합계 기준

<主투자자별 해외투자 비중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 기준, 5년 합계의 비중

8) 동일한 해외법인에 다수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 가장 규모가 큰 투자자를 주된 투자자로 하여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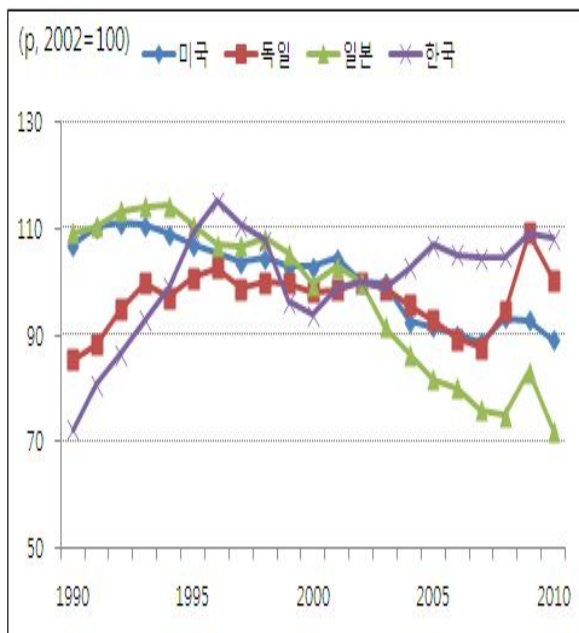
9) 2006년 3월 거주용, 2006년 5월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 조치가 발표된 바 있음

### 3. FDI 순유출 급증의 원인과 문제점

#### (1) 4가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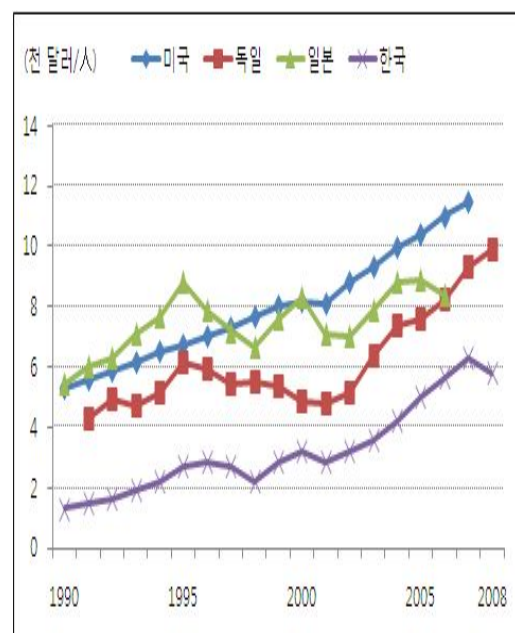
- (비용우위 감소)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아 비용우위 유지가 어려운 상황
  - 1990년 이후 주요 선진국보다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높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아 비용우위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갈 유인은 커지고 있음
    -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1990년 72.4에서 2010년 108.3으로 증가
    - 미국은 각각 107.0에서 89.2로, 일본은 각각 109.2에서 72.1로 낮아짐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도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생활비 순위 51위, 아파트 임대료 순위 54위 등으로 (1998년 각각 31위, 38위) 국내 정주여건도 나빠지고 있음 (※'별첨 표 2' 참조)

< 국가별 단위노동비용 지수 >



자료: 미국 노동성(BLS)  
주: 제조업, 자국통화, 2002년=100 기준

< 국가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자료: ISTANS  
주: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해외시장의 비관세장벽) 주력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NTBs)이 높아짐

-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수입쿼터, 기술요건 등 비관세장벽은 더 높아지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인이 증가함
- 최근 EU는 원산지 요건을 공정의 45%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힘

○ (해외투자 정책 변화) 1990년대 이후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해외직접투자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왔음

- 1994년 투자절차 간소화, 1995년 투자제한업종 축소, 2006년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 2008년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 제한 폐지 등이 영향을 미침

○ (원자재가격 불안)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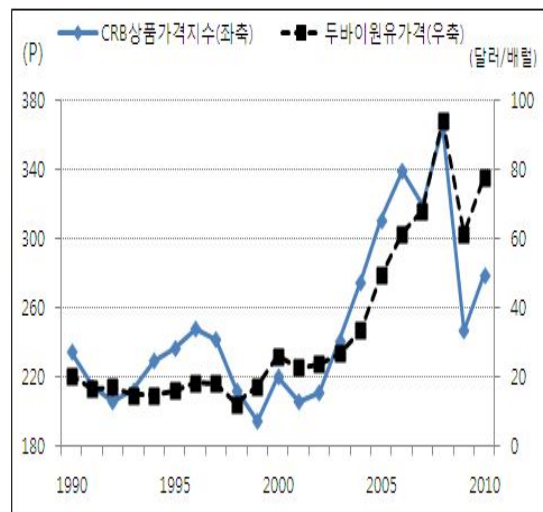
- 2005년 이후 원유 가격의 급등을 방어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남
- 두바이 원유 가격은 1990년 20.45 달러(/배럴)에서 1998년 12.21 달러(/배럴)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 78.06달러(/배럴)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 변화 >

단계	정책 기초
규제 완화 (1991~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12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li> <li>· 1994.12 투자절차 대폭 간소화</li> <li>· 1995.10 투자제한업종 대폭 축소</li> </ul>
민간 주도 (1997~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8 주거은행 신고제로 전환, 자기자금 조달의무비율 폐지</li> </ul>
투자 도약 (200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3 거주용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li> <li>· 2006.5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li> <li>· 2008.1 30대 계열기업 현지금융 제한제도 폐지</li> </ul>

자료: 하병기 (2010) 등 참고로 재작성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www.petronet.co.kr, 블룸버그  
주: CRB상품지수는 1967년(=100) 대비 값



(2) 3가지 문제점

○ (내수 부진) 해외투자 증가는 제조업의 투자 부진을 유발하고, 나아가 우리 수출의 수입의존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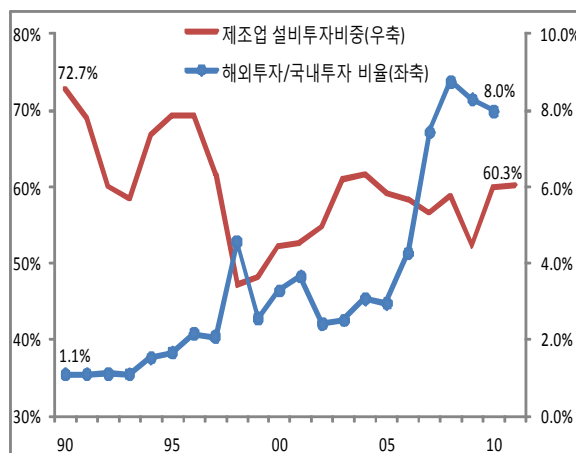
- 해외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설비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은 1990년대 초반 1%에서 90년대 후반 3%대로 올라섰고, 2010년에는 8.0%까지 상승
- 총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1990년 72.7%에서 1990년대 후반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1년 60.3%를 기록했으나, 장기 추세적으로 하락세에 있음
- 특히, 신상품 생산, 수출 수요대비 등 설비능력의 증가를 위한 투자가 2001~05년까지 연평균 25.3% 증가했으나 2006~10년까지는 -1.38%로 급감함

- 제조업의 투자 부진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꾸준히 상승시켜 국내 산업의 연관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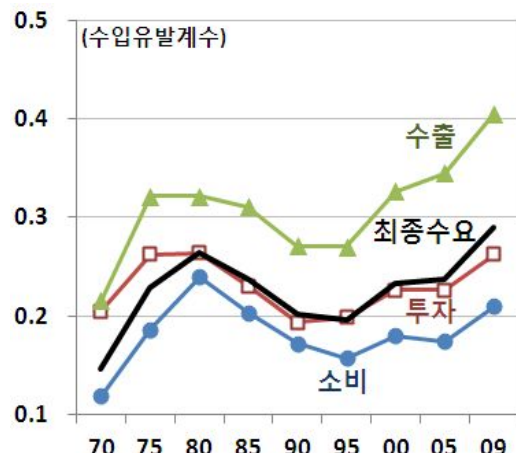
- 최종수요별 수입유발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90년대 이후 수출, 투자, 소비의 수입유발계수가 모두 상승. 특히,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자본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 부문의 수입유발계수가 크게 높아짐
- 부품소재 · 자본재수입/GDP 비율은 1994년 17.1%에서 2011년 28.0%로 증가

<제조업 설비투자와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중>



자료: ISTANS, 현대경제연구원.

<최종수요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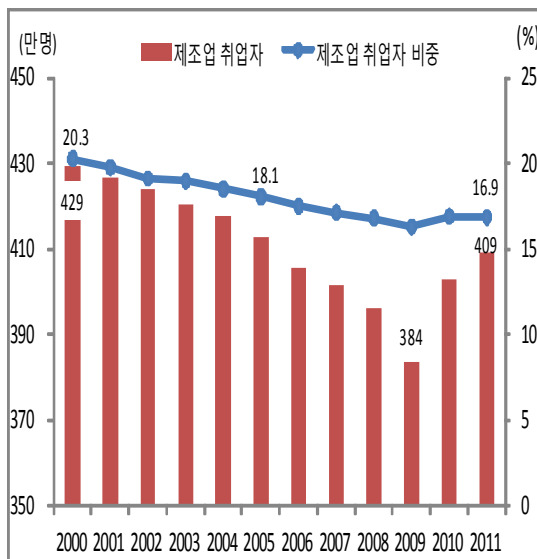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일자리 손실) 해외투자 급증은 국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짐

-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짐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0년 429만 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384만 명(최저치)을 기록한 후 회복하여 2011년 409만 명(-20만)을 기록
  -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도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하락했으며, 독일보다 크게 낮은 상태임<sup>10)</sup>
  - 특히, 제조업 청년 일자리가 2004년 92.1만 명에서 2010년 66.5만 명으로 감소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제조업 관련 일자리 약 66만개의 기회손실이 발생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별 해외투자금액에 연도별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 국내고용 손실규모는 연간 8만개에서 40만개에 달함 (\*12년간 260만개)
  - 광업, 농업, 전력·가스·수도, 제조업과 연계된 판매서비스업 등은 국내에서의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제조업에 국한하여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고용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면 2000년 이후 12년간 약 66만개에 달함<sup>11)</sup>

<제조업 취업자 수와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우리보다 높은 상태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고용 손실>

(단위: 명)	농림어업	광산품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서비스
2000	239	3,785	24,903	48	2,876	52,219
2001	177	1,609	59,609	17	1,317	35,228
2002	288	5,650	43,034	2	2,037	64,834
2003	422	9,327	39,195	0	1,302	32,197
2004	384	3,132	52,918	0	3,024	53,675
2005	353	7,669	43,811	616	5,485	40,409
2006	473	30,317	57,299	993	14,149	69,455
2007	1,133	23,789	63,157	1,391	24,074	159,054
2008	1,478	86,459	70,103	869	20,806	220,091
2009	1,168	126,911	53,958	2,520	12,878	176,897
2010	1,213	100,869	72,519	1,707	6,376	172,109
2011	1,913	193,318	79,348	2,177	14,186	151,851
합계	9,241	592,835	659,854	10,340	108,510	1,228,019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산업별 해외투자금액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 2001~2년은 2000년 계수, 2004~5년은 2003년 계수, 2010~11년은 2009년 계수를 대입하여 계산.

10) 광업까지 합한 광공업 고용비중은 2011년 한국 17.3%로 독일(21.6%)보다 낮고 일본(17.2%)과 비슷(OECD)  
 11) 해외투자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을 유발하는 장기 순환 효과는 제외하고 단기 '기회손실'만 계산

○ (성장잠재력 하락) 국내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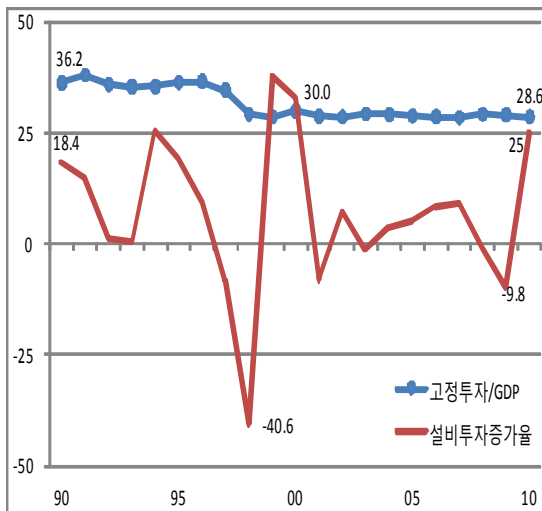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국내 GDP대비 설비투자는 과소투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sup>12)</sup> 지속된 투자부진은 고용창출력 감소로 연결됨

- 설비투자의 전년동기대비 평균증가율은 '80년대 8.8%에서 '90년대 7.7%, 2000년대 7.1%로 건설투자의 평균증가율도 9.4%에서 6.4%, 2.3%로 지속적으로 하락
  - GDP 대비 고정자산 비율도 1990년 36.2%에서 2010년 28.6%로 7.6%p 낮아짐
  - 이러한 투자부진은 고용창출력 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고용탄성치: 0.356('70-'83)→ 0.350('84-'97)→ 0.311('98-'08)→ 0.290('09-'12)<sup>13)</sup>

- 투자 부진과 고용창출력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외환위기 이전 평균 7.4%에서 금융위기 직전 4.7%,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냄<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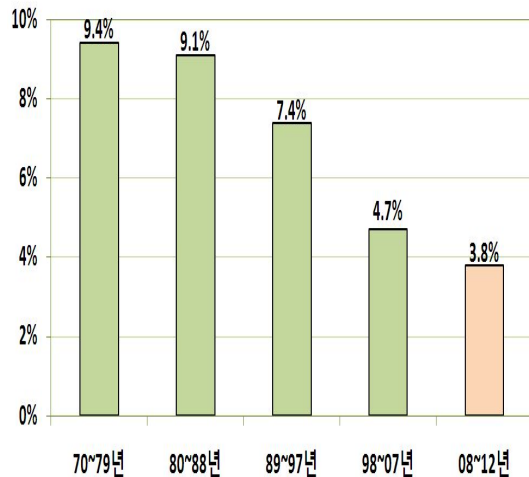
- 국내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직전 기간('98~'07)에는 4.7%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금융위기충격기('08~'12)에는 5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3.8%로 낮아짐

<고정자산/GDP 및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HP필터링을 이용, 기간중 수치는 연평균 성장률이며, 2011년과 2012년 GDP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를 사용.

12)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12-9호,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배경과 전망.  
13)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12-15호, 경제구조 혁신이 고용창출의 근원, 2012.4.18  
14)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12-3(통권 474호), '잠재성장률의 위기'.

#### 4. 시사점 : 'U턴(U-Turn)특구' 설치, 개성공단 활용 등

○ (U턴기업 인센티브 강화)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sup>15)</sup> 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선진국 시장 진출의 이점(merit)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로 U턴하려는 기업을 위한 정책<sup>16)</sup>이 강화되어야 함

- 정부의 U턴기업 지원 방안<sup>17)</sup>에 따르면 해외인력의 국내 재고용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규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독일의 경우 창업기업(중소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4년 동안 고용할 수 있고,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에 세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U턴특구 설치) 경제자유구역과 개성공단을 '유턴 특구'로 활용하여 유턴 기업의 정착을 촉진

-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턴특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6개 경제자유구역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턴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함
- 최근 일본도 3.11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일본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하여 유턴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개성공단에 정착하는 유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국내 노동비용의 상승이 기업의 U턴의 가장 큰 방해요인인 경우 개성공단

15) 지난 1월 EU 집행위는 10%정도의 최종공정(final transformation)만 이루어져도 원산지 규정이 적용 가능했던 것을 45%이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현지생산의 이점이 사라질 것이 우려됨

16) 지난 4월26일(목) 정부는 국내로 U턴하는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설비투자 때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규 고용 시 1인당 최대 월6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U턴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17) 최근 정부는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주던 조항을 계속 연장함과 아울러 해외사업장을 2년 내에 폐쇄하지 않아도 세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으로의 입주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

-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가공을 인정, 한국 산 제품과 똑같이 관세 혜택을 받게 한 것처럼 한-중 FTA에서도 개성공단의 제품을 역외 가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한 해외 R&D기관 유치)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해외 R&D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급인력의 고용기회 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기회로 활용함

- IT장비, IT서비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R&D연구기관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급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해당 R&D연구기관과 연계된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추진함

○ (외국인직접투자 환경개선)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늘려서 순수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의 생활비 수준은 59개 국 중에서 51위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사무실 임대료 수준 43위, 아파트 임대료 수준 54위로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 중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와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해외직접투자의 구조고도화) 선진국의 기술과 판매망을 M&A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고도화 전략'이 필요함

-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OFDI)의 질적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2011년 해외 M&A에 648억 달러를 투자('10년대비 78% ↑)했으며, 그 중 327억 달러를 유럽에서 M&A('10년대비 200% ↑)하는데 투자함<sup>18)</sup>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dykim@hri.co.kr)

조호정 선임연구원 (chjss@hri.co.kr)

18)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수출 특징 및 시사점', 2012.4.2

<별첨 1> 해외직접투자 상위 20개국 추이

순위	1990		2000		2010		2011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5.3	버뮤다	22.5	미국	14.8	미국	36.9
2	인도네시아	19.3	미국	22.2	중국	12.8	중국	11.0
3	스리랑카	16.2	중국	16.3	영국	10.7	호주	9.2
4	캐나다	5.1	홍콩	5.0	베트남	6.2	캐나다	4.2
5	호주	4.4	싱가포르	3.4	케이만군도	5.4	홍콩	3.5
6	필리핀	3.0	필리핀	3.0	인도네시아	5.2	베트남	3.4
7	말레이시아	3.0	일본	2.4	네덜란드	5.2	인도네시아	3.1
8	홍콩	2.7	알제리	2.0	말레이시아	5.0	캄보디아	2.6
9	미얀마	2.5	호주	2.0	브라질	4.6	영국	2.5
10	중국	2.3	인도네시아	1.8	홍콩	4.4	브라질	2.4
11	영국	2.2	베트남	1.6	캐나다	2.8	싱가포르	1.9
12	북마리아나	2.2	볼리비아	1.4	독일	2.3	아일랜드	1.5
13	태국	1.8	파키스탄	1.2	호주	2.2	케이만군도	1.5
14	터키	1.3	독일	1.2	싱가포르	1.5	인도	1.5
15	칠레	1.3	페루	1.0	프랑스	1.4	태국	1.4
16	포르투갈	0.7	폴란드	1.0	필리핀	1.1	독일	0.9
17	온두라스	0.7	영국	0.9	일본	1.0	벨기에	0.8
18	이집트	0.6	우크라이나	0.7	이라크	0.9	저지	0.8
19	독일	0.5	태국	0.7	벨기에	0.9	스페인	0.8
20	멕시코	0.5	캐나다	0.7	파나마	0.9	네덜란드	0.7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주: 신고기준

<별첨 2> 사업환경 국제 비교

분야	순위	
	1998	2011
생활비	31위('97) (주택 제외)	51위('10) (주택포함)
아파트 임대료	38위('97) / (\$2,010/月)	54위('09) / (\$2,602/月)
노동규제	35위	40위
노동시장 유연성	-	36위('09)
노동생산성 (ppp기준)	30위('97)	37위('10)
관료주의	42위	30위
뇌물/부패	-	30위
투명성	43위	26위
사업활동 수월 (Ease of Doing Biz.)	-	43위

자료: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1998, 201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4월 20일	4월 2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6	1.95	-0.01%p
	엔/달러	81.19	80.66	77.66	81.69	81.31	-0.38¥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143	1.3225	0.0082\$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29	13,205	176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561	9,562	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9	3.49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9.4	1,136.2	-3.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74.7	1,964.0	-10.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4월 20일	4월 2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3.39	104.58	1.19\$
	Dubai	88.80	106.75	104.89	115.45	115.82	0.37\$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1.20	303.28	2.0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